

사법농단·부동산 대책... 여야 곳곳 충돌

국감 첫 날...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출석 놓고 야 의원들 퇴장 강경화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 공방

국회는 10월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날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부·국방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우선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사법행정

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해명하려면 출석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제출을 놓고 한국당 의원들과 법원행정처장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쌀 목표가격 문제가 화두였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향후 5년의 쌀값 기준을 정하는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 해로,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 플러스알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으며,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방안 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쟁점이 됐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5·24 조치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외교부도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집값 상승

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와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맞섰다.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판결에 따라 다스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재위 국감에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 여진으로 자료 요구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낱린 '풍등'이 주목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풍등'이 아닌 안전관리 미흡이 문제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각각 쟁점이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향후 5년간 지방재정 19조원 추가 소요”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사업 확대 등에 상당한 규모의 지방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재구성한 '향후 5년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 소요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000억원, 공무원 총원예산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8조4000억원

(7만4000명)으로 최소 19조원이 지방재정에서 추가 소요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는 징수해야 할 지방세 4조원이 징수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5년간 19조원이라는 지방재정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축전염병 방역, 정부가 지방에 떠넘겨”

서삼석 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방역은 국가차원에 관리해야 함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날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대부분 철새로 인해 발생하고 구제역은 해외에서 전염되는 등 지방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으로 방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사육제한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방정부가 100% 부담시에 는 차라리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더 낮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가가 요구한 내용을 100%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기준 없이 졸속 추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은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졸속 추진되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심도있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론에 기초해서 적정인력을 우선 도출하고 그 운영계획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총효용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인력규모를 늘리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공무원 적정인력 규모"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나아가 졸속 추진되는 공무원 증원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평균 성과까지 깎아 내리는 조직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사회 안전 인식도 조사'를 기반으로 '경찰공무원이 증원 됐지만, 국민의 범죄에 대한 주관적 지표인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및 증인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선동열 “병역 미필 여부, AG 선수 선발과 무관”

증인 출석...“청탁 없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선동열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감독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으며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 감독은 이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을 설명

하며 이처럼 해명했다. 야구대표팀은 아시아 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 결과적으로 병역 특례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실력이 비슷하면 군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선동열 감독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오지환 선수 선

발에 있어 청탁이 있었느냐는 질의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어 2017년 각 구단 유격수 부문 선수를 성적을 제시하며 "어떻게 올해 3개월 성적으로 뽑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선 감독은 답변을 통해 "올해 여름 날씨가 많이 더웠다. 8월은 페넨트레이스가 3분의 2가 끝나는 시점이고 베테랑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고갈돼 어려울 것 같아 젊

은 선수 위주로 선발했다. 마지막 최종 엔트리 때 성적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선 감독은 "감독이라면 지금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써야 한다. 통산 성적으로 선발하면 오히려 이롭잖아"고 선수를 쓰는 것"이라며 "선수 선발은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동열 감독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경기를 이기는 것만 생각한 것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